

관리번호	지원대상	지원분야	지원내용	과제구분	완료여부
34	직원	경제적 직접 지원	지방이전 불가능 직원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 허용	규정 개정	완료

세부 지원내용		관련근거	일자	추진상황	비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방이전 불가능 직원 희망 및 명예퇴직 허용 - 지방이전으로 불가피한 경우 희망퇴직 및 명예퇴직 허용(명예퇴직 요건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) 		공기업·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	07.9.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38회 국무회의 보고 - 각 부처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해당부처 장관이 개별적으로 보고 	
소관부처	기획재정부		08.9.3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'08년도 이전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실적 ○ 명예퇴직 및 조기희망퇴직 제도 기마련(98.7) - 명예퇴직제는 20년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시행 	
담당부서	인재경영과		09.6.1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'09년도 이전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실적 ○ 명예퇴직 요건 완화 필요성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 -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의 조기·희망퇴직은 현행 제도 하에서도 가능 	
			13.5.30 '14.1.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'13년도 이전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실적 '13년 정부지원과제 지역발전위원회 점검회의 ○ 공무원과의 형평성, 직원 이주·정착 유도라는 지방이전 정책의 본질에 위배, 우수인력 유출 감안시 추진 곤란 (공무원 조직에 도입 가능성과 함께 중장기 검토 필요) 	

16.9.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해당부처 의견 ○ 혁신도시 이전 기관에 대해서만 요건을 완화할 경우, 공무원 및 타 공공기관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○ 현재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, 추진할 경우에도 실익이 적음 	
17.3.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지원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('17.3.9) - 참석 :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(주재), 도시환경과장 7개 미이행 과제별 소관부처 및 국토부 관계자 - 내용 : 대부분의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현 시점에서 실익이 적음 	